

내년부터 출생축하금 100만원 지급

전주시, 모든 출생아 동일 지급으로 출산 가정에 실질적 혜택 제공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은 도시 만들기
에 앞장서는 전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
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에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을 대폭 확대키
로 했다.

전주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출산 장려정책 중
하나로 출생축하금 제도를 도입한 후
지속해서 제도 확대를 이어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첫째아의
경우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등 차등해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차등하게 지급하던 출생
축하금을 첫째아와 둘째아, 셋째아의
출산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일시금으
로 지급키로 했다.

이는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 2015년
출생축하금 제도를 도입한 후 가장 큰
폭으로 금액이 상향되는 것이다.

시는 그간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인 하락과 인구 구조 불균형 심화라는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출생축
하금을 대폭 증액키로 했다.

이는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



전주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황에도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전주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가능
했다.

실제로 시의회는 지난 8일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를 개정해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 원
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18일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
하면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및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출생축하금을 지
속해서 확대해 갈 방침이다.

상향된 금액은 첫째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기초단체와 비슷한 수준이고, 전북특
별자치도 내 익산·군산과도 유사하
다.

시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 후 대상자
와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한 후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해
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 발굴에도 행
정력을 집중한다.

담당 내년부터 출생축하금이 시행되
면 0세(0~1개월)를 둔 가정에 1620
만 원 상당의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출생축하금 1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자녀양육비,
부모급여(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는 출생축하금 확대뿐만
아니라 도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
업인에게 출산 시 최대 90만 원의 출
산 급여를 지원하며,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백일상·돌상 무료대
여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다자녀가정에 할인 혜택을 지
원하는 다둥이카드 할인가게도 지속
적으로 확대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
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 외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임
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백일해 무
료 예방접종 등 난임·임신부 지원 사
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
후우울증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친환
경 농산물 꾸러미, 셋째아 이상 육아
용품 구입비 지급, 친환경 천기자
지원사업 등을 지속 시행해 나갈 계획
이며, 신청 방법과 자세한 정보는 전
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인구정책)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출생축하금 확
대를 통해 조금이나마 자녀 양육 부담
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
다"며 "앞으로도 출생·양육 가정 등
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도시계획 규제 완화 도시 성장 기틀 마련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 최종 변경 고시



전주시가 현실과 맞지 않은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하나둘씩 걷어내면
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
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
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
차를 거쳐 일률적인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을
최종 변경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이후 두 차례
의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 합리
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폐
지하고, 건축 용도 제한 완화와 개발
행위 규모 제한 폐지 등 불합리한 규
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그간 역사도
심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
폭에 따라 3층까지 혹은 도로 폭만큼
으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문화유
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높일 수 있다.

단 전주시청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의 경우 종남문 주변 높이 제한
기준을 준용해 8m(2층) 이하로 건축
물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시는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허용 및 건폐
율·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고, 불
합리한 건축물 형태·건축선 규제 등
을 정비하는 등 그간 지구단위계획으
로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했다.

/권희성 기자



중앙동 송년의 밤 행사 열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동장 이향란)
자생단체협의회는 전주초등학교 강당
에서 자생단체회원 및 주민들과 함께
중앙동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약 200여 명의 자생단체
회원 및 경로당 회원, 중앙동 주민들
이 참석했으며, 태평이썩 어린이집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 환영사 및
유공 시민 표창, 2부 만찬, 송년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동에서
추진된 다양한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
을 통해 주민들은 소중한 추억을 되돌
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로에게 수
고와 격려를 전하며 소통과 화합의 의
미를 내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상담창구 확대 운영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26일 공포 예정

전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와 양성화
상담창구 운영 확대를 병행하는 등 중
합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
혔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이행강제금 부
과율 완화 △감경 대상 및 기간 확대
△감경비용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
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재난·재해에 따른 긴급조치 건
축물과 옥상 비가림시설이 감경 대상
에 추가되고, 감경 폭도 확대돼 실질
적인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시가 이차별 건축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정부의
기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누적된
위반건축물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보
고, 내년부터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통해 전국적으로 양성화·정비 체
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규 불법건축물
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러한 변화가 시민 생활과 직
결된 만큼, 국토부 규제 개정 전 단계
적으로 시민들을 도와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부터 전주
지역건축사회와 협업체단 완산구 삼천

동 삼산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
고 있는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
를 내년 1월부터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단속 중심의 기존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기로 했
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도
한 부담을 낮추면서도 시민이 스스로
위반행위를 해소하도록 돕고, 동시에
내년부터 시행될 국토부 건축규제 정
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
과 상담창구 운영은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비가림시설 등
규제 완화가 예정된 만큼, 시민의 작
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동반자로서 안전
하고 합법적인 건축 행정을 운영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화합한마당 개최

전주시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회장 김종기)는 지난 14일
전주 시그니처 호텔에서 회원과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직능·중소상공인 세미나 및 화합한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프닝 공연과 만찬을 시작
으로, △개회 선언 △내빈 소개 △우
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내빈 축사 △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어진 세무·회계
분야 강의를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
는 시간을 가졌으며 화합행사를 축하
하는 공연과 경품추첨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 시는 직능·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특례 보증
확대 및 이자 지원사업 △골목상권 드
림축제 △골목형상점가 지정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한우협동조합, 사골곰탕세트 120박스 기부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종성)는 12
일 전북한우협동조합(조합장 김희동)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사골곰탕세트 120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사골곰탕세트
120박스(화가액 500만 원 상당)로 동
절기를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
르신, 한부모가정, 복지사각지대 취약



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이되었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정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남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관공각

내아